2030년 광주는 자연과 첨단이 만나는 예술도시

시민들이 직접 짠 미래상

5년 단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민참여단 130여명 1차회의
내달 8일 2차회의 실현계획

광주시민들이 2030년 광주의 미래상으로 '자연과 첨단이 만나는 예술도시 광주'를 확정했다.

전국 최초로 미래 도시계발 계획을 담는 기본틀을 시민이 직접 짜도록 한 광주시는 이 같은 시민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도시계발 실행 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 주도로 미래 도시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구성된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 130여명은 지난 25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광주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13개 미래상 중에서 '자연과 첨단이 만나는 예술도시 광주'가 최종 미래상으로 선정됐으며, '성숙한 의식으로 성장하는 살맛나는 광주', 'fun한 일자리 숨쉬는 광주' 등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민참여단은 누구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지식을 공유하는 새로운 회의방식인 '월드카페 방식'의 토론을 통해 광주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2030년 광주의 모습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시는 1차 회의에서 광주의 미래상이 정해짐에 따라 내달 8일 2차 시민참여단 회의에서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 과제 선정을 위한 분야별 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8월 22일 최종 3차 회의를 열어 도시미래상과 계획 과제를 확정한 뒤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전달된다.

5년 단위로 이뤄지는 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를 목표로 도시의 미래상(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주택, 기반시설, 교통, 공원녹지 등 물리적 공간 부문과 사회·경제, 환경·에너지, 문화, 복지, 교육 등 비물리적 분야를 포함해 도시의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안용훈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지금까지 관 주도로 만들어졌던 도시기본계획이 시민 주도인 '시민에 의한 도시설계'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참여단은 그동안 행정과 전문가들이 미리 마련한 안(案)을 가지고 행정절차에 의한 공청회를 거쳐 수립했던 도시 구조 설계의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시한 윤장현 시장의 민선 6기 공약사업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왼쪽 네번째)이 2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식에서 선언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개 만들 것"

최경환 부총리 고용 종합대책 발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하게 세제 및 예산상의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에서 유관 부처 장관들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6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에서 청년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산업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해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도 효율적으로 재편해 나갈 것"이라며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를 20만개 이상 만들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20대 인구가 에코세대의 영향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대졸자 노동시장 진입의 일시적 확대,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 감소 등의 삼중고가 겹치면서 앞으로 3~4년간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가중돼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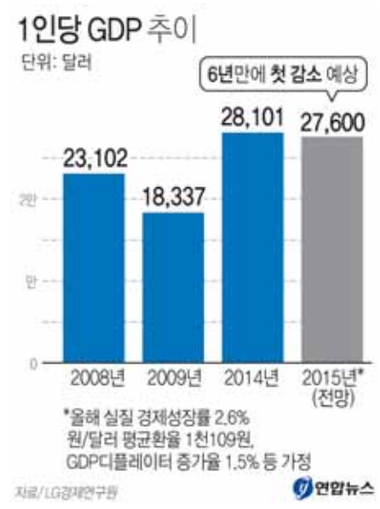
그러면서 "이런 청년 고용절벽 문제는 청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해 국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 일자리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올 1인당 GDP 줄어들 듯
10년째 2만달러대 정체
한국경제 '저성장' 늪 진입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만 그치는 현상은 아니다.

중국 경제의 둔화와 함께 전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이 정체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인당 GDP가 대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국이 10년째 1인당 소득 2만달러대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도 전에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2023년에야 4만달러 전망
고환율→수출증가 공식 실종

◇ 한국 저성장 고착화?=세계 경제 성장률은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둔화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0%까지 떨어졌던 성장률은 2010년 5.4%로 반등했다. 하지만 2013년과 2014년 연속 3.4%에 머물렀고 올해는 3.3%에 그칠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IMF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선진국과 신흥국의 잠재성장률이 모두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IMF에 따르면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1인당 GDP는 한국과 미국,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 지난해 2만8101달러에서 올해 2만8338달러로 전망됐으나, 성장률 부진과 환율 상승으로 1인당 GDP가 2만7000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소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올초만 해도 한국경제가 올해 1인당 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 뒤 내년부터 4만달러를 향해 달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3만달러 달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은 1995년 처음으로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 도달했으며 2006년 2만달러에 진입했으나 이후 10년 가까이 3만달러 시대를 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2만달러에서 3만달러에 진입하기까지 10년이 걸렸지만 독일과 일본은 각각 5년만에 이뤄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1인당 국민소득은 2023년에야 4만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수준이 높은 G7 국가들은 대부분 잠재성장률이 반등한 반면, 한국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고환율→수출증가' 공식 안 통해=환율 상승은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 신흥국의 전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환율 상승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공식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수출 경쟁력에 큰 도움이 안되고 있다. 엔화가 원화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수출품목이 비슷한 일본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4년 전 처음으로 자산매입을 통한 통화완화정책에 나선 이후 엔화는 달러화에 대해 40% 떨어졌다. 엔화는 또 2012년 9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원화에 대해서는 57%나 하락했다.

1년 전만해도 여러 국가들이 환율전쟁에 참여해 자국 통화절하를 겨냥했지만 중국과 유럽, 미국 등의 부진한 성장률과 원자재 가격 하락은 통화절하를 통한 수출 증가의 기대를 무색케 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은 민간소비 침체가 두드러져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의 진입이 늦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해 세월호 사태와 올해 메르스 등으로 소비가 큰 타격을 입었다. /연합뉴스